

# 내달부터 1회용 비닐봉투 단속강화



서울시가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업소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4월부터 자치구·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 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됐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됐다.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결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

서울시, 자치구·시민단체와 함께 단속강화  
대규모점포·슈퍼마켓·제과점 등 점검대상  
최저 5만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이다.

결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별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생선, 정육, 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담은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시는 또 4월부터 위반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4일부터 14일까지 커피전문점 3488개소에 대해 점검해 위반사업장 11개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돼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은 지속된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이 철거됐다. 천막 철거는 지난 2014년 7월 설치된 이후 약 5년만이다. 위 사진은 18일 오전 철거 직전의 모습.

## ‘세월호 천막’ 사라진 첫 주말 “철거 아쉬워” vs “전시공간 안돼”

머구름이 낀 23일 오전 세월호 천막이 사라진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안전 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자리다.

광화문광장에 설치·운영됐던 세월호 천막은 지난 18일 철거됐다. 2014년 7월14일 설치된 이후 약 4년8개월, 1708일 만이었다. 광장의 한 켠에는 이제 전시공간 공사 현장을 가려 놓은 가림막만 남았다.

이날 오전 만난 시민들은 원래 모습을 되찾은 광장을 둘러보며

지만 깔끔한 전시공간이 새로 조성되는 것에는 환영하는 분위기도 느껴졌다.

윤씨는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며 “기억 공간에서 유가족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함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광화문광장에 전시공간을 세우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모(60)씨는 “유가족의 슬픔

시민들 “진상규명 아직…추모할 때 아니야”  
“광장 모든 시민의 것…왜 세월호 유가족만?”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진상규명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텅 비어버린 모습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과 함께 광화문광장 인근의 서점을 찾은 이해영(43)씨는 “문제가 전부 해결될 때까지는 천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곳이 이곳 광화문광장 아니냐고 말했다.”

이상훈(44)씨는 “지금은 추모가 아닌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할 때”라며 “(천막을 철거하고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은) 현 상황에서 일부는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막 철거에는 아쉬움을 표했

은 이해하지만 서울의 중심이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 광화문광장”이라며 “사고를 계속 떠오르게 하는 추모공간도 아예 광장에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50대 여성은 “국가를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한 추모공간도 광화문에 만든 적이 없다”며 “보기에도 안 좋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광화문광장은 모든 시민의 공간”이라며 “차라리 광화문에 은행나무가 많았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고 덧붙였다.



## 서울 지하철 적자됐다...승객 1명당 510원

“무임승차가 원인”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액수는 510원 씩이었다.

24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는 1456원, 평균 운임은 946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510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무임승차는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다.

손실은 운영기관의 몫이다.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해 2억 6105만명이었다. 전체 탑승객의 14.9%의 비율이다. 손실액은 3540억원이다. 전체 적자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

무임승차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3.7%, 2015년 14.1%, 2016년 14.3%, 2017년 14.7%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무임승승 자체가 대도시 내 사회복지장치로서 기여도가 큰 것을 감안해 운영기관의 전적인 부담이 아닌 정부차원의 보전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 선정

서울시, 10년간 영업보장...임대료 5% 이하 인상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5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 371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10월에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됐다.

또 지난 3년간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다.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부,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모집공고일인 25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19일까지 하면된다.

시는 선정된 상가에 대해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